

■ 이 슈 진 단

2014 정기 국정감사, 건설 분야 최대 이슈는 ‘안전’

조 철 현 | 이데일리 사회부동산부 부장

‘국회 기능의 꽃’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의도 정가가 분주하다. 올해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결로 일정이 예년 보다 상당히 많이 늦춰졌다. 빠듯한 일정 탓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감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의원 개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특정 현안이나 이슈를 놓고 정당 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다루어질 주요 건설 관련 이슈들을 살펴봤다.

최대 이슈는 ‘안전’

올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테마는 ‘안전’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시설물 안정성 문제가 국감의 주요 재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빌딩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다뤄질 전망이다. 잇따른 싱크홀과 동공 발생으로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인데도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

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를 다루는 서울시와 롯데 측의 태도에 대한 칼날이 국회에서 휘둘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불량한 지반 위에 123층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롯데 측이 뜨거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2롯데월드 부지의 기반암이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하다”며, “지질 불량으

로 지반 침하 우려 등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강 의원이 분석한 1997년 조사는 약 31m 정도의 시추 조사를 한 것으로 초고층 건물 기초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 조사가 아니다”라며, “롯데는 2006년 2월과 201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 90m까지 시추 조사를 하는 등 초고층 건물 시공을 위한 상세 지반조사를 진행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는 강 의원실이 주장하는 지하 31m의 기반암이 아닌 지하 38m의 연경암 이상의 양호한 암반 위에 시공됐다는 것이다.

시설안전공단 등도

주요 국감 재료

아울러 시설안전공단도 주요 국감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과거 시설안전공단 국감이 댐·교량 등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 등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면 올해는 공단의 역할 자체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상하수도·옹벽·절토사면 등 대형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근거법은 그 규모에 따라 주로 대형은 「시특법」, 중소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무 부처도 각각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로 나뉜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6만 6,370개에 달한다. 1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강도 높은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2종 시설물은 안전 점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문제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통보받은 2종 시설물 가운데 진단을 미루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안전점검 실적 보고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번 국감의 주요 메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준공 이후 1년 이내에 ‘정기 점검’, 준공 이후 4년 이내에 ‘정밀 점검’, 준공 10년이 지난 1종 건물에 한해 1년 이내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 점검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 점검 실적 집계 결과 정기 점검의 34.8%, 정밀 점검의 31.4%, 정밀 안전진단의 50%가 각각 안전 점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안전진단업체의 저가 수주와 영세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설물 안전진단 수주액은 1,073억원으로 2009년(1,600억원) 이후 줄곧 줄고 있다. 10년 전인 2004년(733억원)과 비교하면 300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수는 3만 6,000여 개에서 6만 5,000여 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시설물 한 곳당 안전진단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사정이 이런대도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해마다 불어나 2008년 387개에서 지난해 658개로 급증했다.

“부동산 법안 처리는 언제쯤?”

불안한 전·월세 시장 원인과 정부 대책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이 창과 방패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전셋값 급등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

■ 이 슈 진 단

9·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법 개정 사항

추진 과제	조치 사항	추진 일정	소관 기관
공공관리제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9월 국회 제출	국토교통부
안전사고 우려 주택 관리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1월 국회 제출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주택법 개정	10월 국회 제출	
청약 대상 주택 유형 단순화	주택법 개정	10월 국회 제출	
기부채납 관련 제도 개선	주택법 개정	내년 하반기 국회 제출	
대규모 택지 공급 중단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0월 국회 제출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의무 기간 연장	주택법 개정	9월 국회 제출	
공공 임대 리츠 취득세·재산세 현행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0월 국회 제출	안전행정부
다가구주택 준공공 임대 면적 제한 폐지	임대주택법 개정	9월 국회 제출	국토교통부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0월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주택법 개정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국토교통부

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을 국회의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지연 때문이라고 몰아붙일 태세이다.

반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재개발·재건축 출구 전략 일환인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류 법안 중에서도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쟁점이 많이 좁혀졌지만 야당이 임대차등록제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망은 밝지 않다. 9·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세월호 특

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에 더해 야당의 당내 리더십 부재까지 겹친 까닭이다. 국정감사에 내년 예산안 심사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1 대책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 등이다

이번 9·1대책의 핵심 내용인 재건축 연한과 주택 건설 규모 제한 완화,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는 시행령과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관리제 개선 및 안전사고 우려 주택 관리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으로 분류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해당 법안들을 ‘부동산 투기 조장 3대 법안’이라고 판단해 반대를 못박은 상태다.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임대주택 리츠의 취득세 및 재산세 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고 준공공임대등록시 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도 「임대주택법」 개정 사안이다.

이 외에도 공급 조절의 핵심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건축초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감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특정 현안이나 이슈를 놓고 정당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국회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시장 효과를 보기 위해선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기업 방만 경영 '집중 포화'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실 및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은 국감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올해 국감에서도 국토위 위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와 다른 공공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전문직원제도 등의 방만 경영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에도 '4대강 사업' 이슈로 곤혹을 치를 것 같다. 야당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8조원을 정부 재

정으로 갚아선 안 된다며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4대강 보 인근에서 발견된 '큰빛이끼벌레'와 4대강 사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4대강 보 건설이 유속의 흐름을 막아 큰빛이끼벌레를 확산시켰다고 보는 반면, 여당은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식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 태국 정국 불안으로 보류된 6조원대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성급한 사업 추진도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 건설 등 공사 입찰 담합도 핵심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올해 적발된 건설사 담합 건수는 13건, 과징금 규모

는 9,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간 관행처럼 해온 입찰 담합이 입찰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LH의 임대아파트 관리 실태 등도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소방방재청과 함께 점검한 결과 소화기와 CCTV(폐쇄회로 TV)조차 없는 임대아파트가 많았다고 하며 LH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할 태세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아파트 관리를 아예 주택관리공단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LH가 임대아파트 관리를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또는 민간 관리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